

예산안 오늘 자동부의... 남북협력기금·일자리예산 벼랑끝 대치

예산소위 1차 감액심사 220건 보류... 세수 부족분 이전 문화상 국회의장 오늘 본회의 소집... 예산안·부수법 상정

국회의 정부예산안 심사가 법정시한 내 마무리되지 않은 가운데 여야 3당이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단 협의체인 소소위를 가동, 막판 협상에 착수했지만 예산안 처리가 정기국회 회기(9일까지)마저 넘길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소소위 회의를 통해 이틀째 예산심사를 이어갔다.

앞서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예결위 활동이 종료된 직후인 전날 오전부터 모여 남은 예산심사를 예결위 간사 중심으로 하고, 쟁점 예산에 대해서는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관여해 답판을 짓기로 합의했다.

문화상 국회의장은 오는 3일 국회 본회의를 소집해 1일 0시 자동부의된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원안대로 상정하고, 안건을 계류시킨 상태에서 여야 협상 타결을 기다릴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번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인 12월2일이 휴일인 만큼 3일에만 의결해도 사실상 시한을 지킨 것이나 다름없다며, 밤을 새워서라도 당일 심사를 마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앞서 오는 7일로 예정된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여야 3당 지도부가 정치적 결단만 한다면 3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표결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논의 경과를 고려할 때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오히려 남북협력기금과 일자리 예산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싸고 벼랑 끝 대치를 벌여 예결위 간사 간 비공식 회의체마저 일시 파행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동안 예결위 예산소위 1차 감액심사에서 여야 이견으로 보류된 예산은 220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날 오후 1시께 소소위 참석을 위해 국회에 모습을 보인 민주당 조정식, 한국당 장제원, 바른미래당 이해훈 의원 등 간사들은 남북협력기금과 일자리 예산, 나아가 4조원 상당의 세수 부족분을 놓고 입장차를 드러냈다.

이 의원은 예결위를 파행에 치닫게 했던 4조원 세수 부족분에 대해 "어제 제시한 안이 있지만 협상이 끝날 때까지 공개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그래서 공개하기 어렵지

만 아쉬운 구석이 많다. 하지만 저는 예산을 다루는 정부 입장에서 나름 고민했다고 인정하고 심사를 계속했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제가 (정부를) 믿고 간다고 했는데 그 믿음이 깨졌다. 정부가 2번씩이나 공개적으로 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렸다"며 "정말 참담하다. 야당을 헌신짝처럼 생각하고 공식석상에 남은 속기록에도 미안하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민주당은 세수결손이 아니라 세수변동분이라 생각한다. 전체와 연동돼 있기 때문에 소소위에서 심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하고 원내대표단에 넘어가면 거기에서 결정될 사안이 아닌가 싶다"고 답했다.

전례를 볼 때 3일 본회의 처리가 무산될 경우 여야 합의안이 도출되기까지 또다시 여야 간 지루한 줄다리기를 지속할 공산이 크다.

가까운 예로 12월6일 새벽 예산안을 의결해 법정시한을 나흘이나 초과한 작년과 비교해도 올해 예산심사 속도는 상당히 뒤쳐진 것으로 평가된다. 또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후 예산안 처리 시점이 12월 2일(2014년)에서 3일(2015·2016년)로, 다시 6일(2017년)로 조금씩 계속 뒤로 밀린 것도 '나쁜 선례'의 고착화를 우려하게 한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예결위 간사가 2일 오후 국회 예결위 회의장 안 밀실에서 열린 예결위 소소위 회의에 참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휴일 잇은 기재위

중부세·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등 논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휴일인 2일 조세위원회를 열어 이미 자동부의된 예산 부수법안에 대해 추가 논의를 이어갔다.

기재위는 이날 오후 2시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쟁점 세법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열었다.

이 법안들은 지난 28일 문화상 국회의장이 세입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한 법안들

로, 국회법에 따라 1일 0시를 기해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이에 따라 상임위에는 공식적으로 계류된 법안이 없는 상태여서 논의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조세소위는 '조세정책 현안에 대한 검토'라는 안건을 올려놓고 이 법안들을 대한 심사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관례대로라면 각 당 원내대표나 예산

결산특별위원회 간사들이 논의해 결론을 내야 하는 사안이지만, 기재위 조세소위가 다뤄오던 안건인만큼 마지막 순간까지 최대한 여야간 합의를 통한 수정안을 소위 차원에서 만들어내겠다는 의지다.

기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경주의 의원은 "예전 같으면 기재위 여야 간사 차원에서 논의를 하거나 했지만 끝까지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여러 가능성에 대비해 최종적으로 좋은 수정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상임위에서 실무적 조율작업을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강한 리더십 존재감 ... 당정청 관계 복원

이해찬 민주당 대표 취임 100일... 낮아지는 지지율 '과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사진) 대표가 2일로 당 대표 취임 100일을 맞았지만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일단 대체적으로 이 대표가 '강한 리더십'을 구현하며 국정 운영의 한 축으로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는 평가다. 그동안 청와대의 그늘에 가려 '담이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을 잠재우고 '강한 여당'으로 발돋움, 국정의 삼두마차인 당정청의 관계를 복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내고 당의 정책위의장을 3번이나 지낸 관록을 바탕으로 민감한 정책에 대해 때때로 한발 앞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 대표의 종합부동산세 강화, 공급 확대 주문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고스란히 반영된 것이 대표적이다. 최근 카드업계의 반발에도 자영업자를 위한 카드 수수료를 인하 정책이 나올 수 있었던 것도 이 대표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는 후문이다.

이 대표는 남북관계, 민생·개혁 과제와 관련한 각종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일하는 정당' 이미지를 쌓는 데도 방점을 찍었다. 현재 당내에는 동북아평화협력특위, 소상공인특위 등 상설 특위 7개와 비상설 특위

18개가 가동되고 있다. 또 '의원들과의 식사 정치' 등을 통해 당내 소통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이 대표는 '20년 집권론' 같은 발언으로 야당을 계속 자극하고, 언론과 소통도 제한적이며 선택적이고 편향되게 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특히, '호통 총리', '버럭 해찬' 등의 별명처럼 이재명 경기지사 논란 등과 관련한 민감한 상황에 대한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오만하다는 비판도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경향이 두드러진 당의 지지율은 이 대표의 최대 고민이자 숙제로 꼽힌다. 문재인 대통령과 당의 지지율이 각각 40%대, 30%대 후반으로, 집권 후 최저치로 떨어져 여권 전체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특히 정권 교체에 큰 역할을 한 20대·영남·지역영자, 이른바 '이영자'의 이탈이 심상치 않아 여당의 리더인 이 대표의 고민은 더욱 깊다.

또 선거제 개혁 접근법도 난제다. 이 대표는 중소야당이 사활을 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취했다가 '말 바꾸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당 차원에서 '연동형 배분 방식을 반영한 권역별 비



레대표제'를 제시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민주당이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 모호한 태도를 보인다는 의심을 해소하지는 못한 상태. 결국 이 대표가 선거 개혁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야권과의 협치 등 정국 주도권 확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민심 반영 '비례제' 반드시 도입해야"

천정배 의원, 민주평화당광주시당 초청 강연

민주평화당천정배(광주서구) 국회의원이 "호남의 정치적 위상을 회복하고, 그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민심그대로선거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2일 광주 서구청에서 민주평화당연구원과 민주평화당 광주광역시당 주최로 개최된 '왜 민심그대로 선거제인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도 개혁' 초청강연에서 "양대 기득권 정당의 승자독식 구조로 인해 호남은 소외와 차별을 받았고, 전라투표표를 사실상 강요받는 정치상황 속에서 개혁세력 내에서도 영남 정치세력에 종속되어 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천 의원은 "민심그대로선거제를 도입하면 호남 뿐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정치 시스템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천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난맥상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실패가 촛불국민혁명의 성과를 수포로 돌릴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



과 민주당은 민심그대로선거제 도입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그것만이 수구기득권세력의 재기를 막고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을 유일한 길"이라고 밝혔다.

천 의원은 또 "촛불 민심은 곧 개혁이다. 촛불민심의 대변자로서 집권여당이 된 민주당이 자신들이 약속한 민심그대로선거제 도입을 거부하는 것은 말그대로 기득권에 취한 모습"이라며 "민심그대로 선거제 도입으로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면, 국민과 역사의 호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박지원 전남도당위원장, 최경환 광주시당위원장 등 당원과 시민 700여명이 참석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윤곽

나경원·유기준 등 출사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2일 현재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에는 4선의 나경원·유기준 의원, 3선의 김영우·김학용·유재중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거나 사실상 출마를 공식화한 상태.

이번 원내대표 경선에서는 계파별 후보 단일화 여부가 경선의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경원·유기준·유재중 의원은 친박(친박근혜)·잔류파로, 김영우·김학용 의원은 비박(비박근혜)·북당파로 분류된다. 이들 5명의 주자 모두 경선 완주 의지가 강해 단일화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아울러 경선 날짜도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선거운동 기간에 따른 유불리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일찍 출사표를 던진 후보와 뒤늦게 뛰어든 후보간 경쟁이 치열한 이유다. 오는 11일로 김성태 원내대표의 임기는 끝나지만, 차기 원내대표 경선 날짜는 미정 상태다. 김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예산안부터 처리한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박지경 기자 jkpark@

다 타면 출발 X

다 매면 출발 O

국민 안전을 위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가
고속도로는 물론 일반도로까지 확대/시행됩니다

*위반 시 운전자 과태료 3만원 (13세 미만은 6만원)
*6세 미만의 어린이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꼭 착용해야 합니다

9월 28일, 모든 도로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경찰청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손해보험협회